

# 삼호, 골프장만 달랑 착공...삼포, 수년째 민간사업자 못구해

## 영암·해남 기업도시 개발 어떻게 되거나

### 공정률 12% 구성지구 시행사, 부채가 자본금 규모 넘어서 전남도 3개 지구 554억 투입...2025년 시한내 완공 난망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10년 이상 추진되고 있지만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할 민간자본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2025년 시한까지 사업을 마칠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F1경주장 주변으로 자동차 튜닝·고급 부품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삼포지구의 경우 2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한 뒤 철수한 건설업체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기업을 수년째 찾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구성지구 90억원, 삼호지구 75억원, 삼포지구 173억원 등 모두 338억원을 출자했으며, 전남개발공사는 구성지구 90억원, 삼포지구 126억원 등 216억원 등을 투자하는 등 모두 554억원의 현체가 투입돼 있다.

◇삼호지구, 지난해 9월 45홀 골프장 착공=사업부지가 866만1000㎡인 삼호지구의 자본금은 450억원이다. 사업자인 서남해안레저(주)는 에이스회원권거래소, 삼환기업, 한국관광공사, 전남도 등이 투자했으며, 지난해 3월 농어촌공사로부터 사업부지의 97.4%인 843만8000㎡를 매입했다.

6개월 뒤인 지난해 9월 에이스회원권거래소가 45홀 골프장 공사를 시작했으며,

지난 2013년 말 현재 자산총계는 441억원, 부채는 4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부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남도는 예상하고 있다.

81홀의 골프장과 스포츠·레저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 골프장 이외에는 개발 수요가 없는 실정이다. 사업자 측은 골프장 회원권 분양을 통해 추후 개발자금을 조달할 방침이다. 3036억원이 투입되는 영암 삼호읍(국도2호선)~해남 산이면(지방도 806호선)의 진입도로 10.83km가 완공되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구성지구, 부채가 자본금 넘어서=구성지구는 전체 솔라시도 면적의 3분의2를 차지하는 2096만㎡(634만평)으로, 2025년까지 1조1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생태관광, 바이오 에너지, 지역문화 체험, 종합 레포츠 등이 어우러진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100홀이 넘는 골프장, 신재생 및 바이오 시설, 의료시설, 컨벤션센터, 마린, 승마장, 남도음식문화촌, 워터파크, 휴양 숙박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말 골프장 사업인가를 받을 예정으로, 내부 도로(25km) 공사, 단지 조성 공사 등도 진행 중이다. 보성건설, 한양건설, 전남개발공사, 전남도, 한국관광공사, 광주은행 등이 출

### ◇영암·해남기업도시 추진 일정

- ▲2005년 1월 서남해안개발사업 국가사업 추진 정부부처 합의
- ▲2005년 12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정
- ▲2010년 10월 구성·삼포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계획 승인
- ▲2011년 9월 삼포지구 1단계(F1경주장) 준공
- ▲2013년 2월 구성지구 착공
- ▲2013년 12월 솔라시도 기업도시 기공식
- ▲2014년 5월 삼호지구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 ▲2014년 9월 삼호지구 골프장 착공
- ▲2015년 2월 국토교통부 등 전남도 공유수면 토지화 제안 부정적 의견 제시

자한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사업자로, 지난 2013년 말 현재 자본금 900억원(35억원 결손 처리), 자산총계는 1738억원이다. 부채 총계는 872억원으로 자본금을 넘어섰다. 현재 공정률은 12% 정도를 보이고 있다.

◇삼포지구, 민간사업자 수년째 못구해=F1경주장을 중심으로 영암군 삼호읍 428만㎡의 면적의 삼포지구는 주식회사 카보가 사실상 '페어리 컴퍼니'로 전락한 가운데 '민간사업자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 전남개발공사, SK건설, 신한



서남해안 기업도시 사업지구 중 한 곳인 구성지구 전경. 구성지구는 면적만 2096만㎡(634만평)으로 2025년까지 생태관광, 바이오 에너지, 지역문화 체험, 종합 레포츠 등이 어우러진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은행, 농협, 광주은행 등이 자본금 600억원을 출자했지만, F1경주장은 전남도, 부지는 전남개발공사로 넘어가면서 자산 규모는 고작 13억1700만원만 남아 있다. 개발계획상 F1연구단지, 상업시설, 주택 등의 조성이 예정돼 있다.

전남도는 F1경주장 주변 99만여㎡에 자동차 튜닝 및 고급 부품단지를 조성, 관련

기업 100여개를 유치할 방침이지만 이제 막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양·한 방의료시설, 쇼핑센터, 호텔, 카지노, 마린 등 의료·관광·휴양 기능의 시설들로 채울 계획이지만, 투자하겠다는 국내기업이 없어 정체상태인 실정이다. 중국, 미국 등의 자본이 관심을 갖고 제안서를 낸 곳도 있으나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는 미지

수다. 전남도 관계자는 "개발부지의 84%가 방조제 준공에 따라 형성된 사실상의 토지이지만 매립 준공이 되지 않아 법상 공유수면 상태에 남아 있다"며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가 성공의 핵심 사안인데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가로막혀 있다"고 토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정치권 때아닌 보성강댐 '물싸움'...지역분쟁 번지나

### 이정현 의원 "물길 돌려 순천·여수 생활·공업용수 활용"

### 김승남 의원 "영향 조사가 먼저...유역변경 논의 중단해야"

보성군 득량면의 보성강댐 물의 사용처를 놓고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순천·곡성)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고흥·보성) 간 갈등이 일어날 조짐이다. 자칫 지역 간 '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발단은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보성강댐은 유역변경으로 섬진강 유역이 아닌 득량만으로(일부) 물을 방출하고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1억1600만t을 방류하고도 여기서 나온 전력량은 매출액 기준으로 37억원에 불과했다"며 "득량만 농경지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더라도 8800만t의 물이 오로지 수력발전만을 위해 바다로 방류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이 의원은 이어 "보성강댐 물을 수력발전 용

도 대신(순천·광양·여수)의 생활 및 공업, 농업 용수로 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해 윤상직 장관으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이 의원은 또 "여수와 광양의 물 부족에 대비해 국토부가 구례 피아골 근처에 댐 건설하려 했던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덧붙였다.

당시 이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이대로 시행되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김 의원이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 의원은 12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생태환경 변화에 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섬진강수계 환경 개선을 위한 보성강댐 유역 변경 논의를 즉각 중단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우선 "농업용수량은 당해연도 가뭄 정도, 취입보·농업용수로 등 농업용수 공급시설 및 현장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바다로 방류되는 8800만t이라는 근거는 농어촌공사의 '연 3000여만t의 농업용수를 쓰고 있다'는 구두 답변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실제로는 최소 6400만t의 농업용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담수의 유입량이 줄어들 경우 득량만 일대 양식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의원은 아직 농업용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방류량을 줄일 경우 득량만에 어떤 환경적 변화를 유발할지 등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유역 변경 논의를해서는 안 된다는 반박이다. 한편 보성강댐에서는 연 2억1000만여t의 물이 섬진강 수계로, 1억1600만여t은 보성강 발전소로 흐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의원 명의로 집행 못한다

### 행자부 규칙 개정안 내달 시행

### 9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제한

개인명의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집행규칙에 명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행 지자체 업무추진비규칙은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에게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방의회가 지역 여론수렴 활동을 하면서 집행한 비용 등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했다. 또 일부 지방의회가 업무 추진비를 '삼

짓돈'처럼 쓰는 사례도 드러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 업무추진비규칙에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 중구 구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행자부의 지자체 업무추진비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격려·지원 ▲각종 회의·행사·교육 ▲의정활동 및 지역 내 홍보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에만 쓸 수 있다.

또 동료 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부의를 금하고는 지방의원 개인 명의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집행방식도 제한된다.

행자부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지자체 업무추진비규칙 개정안을 확정 짓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지방부는 지방의원 업무추진비규칙이 마련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해소되고,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경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직무 수행을 위한 '시도의회 운영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나뉜다.

의정운영공통경비 기준액은 시·도의원 1인당 연간 610만원, 시·군·구의원 1인당 48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시·도의회 운영업무추진비는 서울·경기가 직위에 따라 1인당 160만~530만원, 나머지 시도가 130만~420만원이다.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405억원(광역 93억원, 기초 312억원), 실제 집행액은 356억원(광역 85억원, 기초 271억원)이다. /연합뉴스

##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